파국 면한 언론중재법 합의까진 험로

여야4인 '8인협의체' 첩첩산중
사실상 원점서 논의될 수도
여, 합의불발시 강행처리 의지

여야 간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가 '8인 협의체' 가동으로 2라운드를 맞게 됐다. 여야가 지난 31일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미루고 협의체를 꾸리기로 해 파국을 면한 듯 보이지만, 협의체에서 양측간 화력 대결 속에 밀고 당기기가 벌어질 수 있다.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가 워낙 첨예했던 만큼 여야는 각 4인씩 8인(의원 4명+전문가 4명)으로 이뤄지는 협의체 구성에 신속히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몫 2인으로는 당 미디어혁신특위 위원장인 김용민 최고위원, 상임위에서 법안 통과를 주도해 온 김승원 의원 등이 거론된다. 전문가 출신 인사로는 민변과 참여연대 등 언론개혁 취지에 공감하는 단체에서 끌어와 입법 추진에 힘을 실을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언론인 출신으로 개정안 본회의 상정 시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던 김은혜 의원이나 최형두 의원의 합류가 유력하다. 전문가의 경우 현직 기자와 언론 관련 시민단체 출신 인사 중에서 물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중재법 개정의 부당함을 호소하면서 협의체 내에서 야당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다는 계획이다.

협의체에서는 최대 5배인 징벌적 손해배상의 규모, 언론 보도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등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 적용 대상에 외신이 포함되는지 등을 두고 혼선이 있었던 만큼 이런 '디테일'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협의체를 띄운다 하더라도 여야가 얼마나 견해차를 좁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합의문에 명시된 협의체의 활동기간은 언론중재법의 본회의 처리 D데이의 하루전인 9월 26일까지로, 한달이 채 안된다. 위원 구성 등 준비 시간을 감안하면 실제 활동 기간은 더 줄어들 수 있다.

야당은 개정안이 언론의 자유를 지극히 위축시킬 수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등의 삭제를 주장하지만 여당은 이 경우 법 개정의 의미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사실상 당내에서도 개정안 처리 강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며 여당이 한 발 후퇴한 양상인 만큼 협의체 내에서도 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 '원점에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듯 김용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기왕 이렇게 됐으니 법안 후퇴가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채우겠다"며 "소란스러운 한 달이 될 것 같다"고 적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협의체에서 합의가 안 되면 진짜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강행 처리를 시사했다.

그러나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중도층의 표심 등을 고려하면 이 같은 계획을 실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맨 오른쪽)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위한 협의체 구성, 9월 27일 본회의 상정 등의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가운데는 박병석 국회의장. /연합뉴스

김부겸 총리 "이재용 석방했는데 경영활동 금지 적절치 않아"

FT 인터뷰 경영 복귀 지지 표명

김부겸 국무총리가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활동 복귀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공개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경영활동 복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이미 석방이 된 상황에서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적절한 방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부회장이 너무 일찍 법적 책임을 면했다'는 비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이 부회장의 상황에 대해 '편협한'(narrow-minded) 접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이 재벌의 역할에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이 부회장의 사업 기회를 빼앗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여론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재벌에 대한 관리·통제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한국의 법치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는 반도체 글로벌 경쟁 격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도전 등에 대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또 "재벌이 2~4세대로 넘어가면서 배타적인 특권들이 사라지고 있다"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더 나은 투명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재벌 개혁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재수감돼 복역하다 광복절 가석방으로 지난 13일 출소했다.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를 두고 취업제한 위반이라는 비판이 나왔으나 법무부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행정법원 판결 사례를 들며 이 부회장의 경우 비등기 임원이므로 경영에 참여하더라도 '취업'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역선택 방지' 전면전

정홍원 위원장 룰 재검토 입장
유승민·홍준표 캠프 강력 반발

국민의힘에서 대선 경선이 시작되자마자 '게임의 룰'인 경선 규칙을 놓고 주자 간의 신경전이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에 범여권 지지층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놓고 윤석열·최재형 후보 대 홍준표·유승민 후보가 각각 전선을 구축, 대척점에 서서 정면충돌하는 모양새다. 룰 갈등은 정홍원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당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공정성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31일 기자회견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는 순간 공정한 경선은 끝장난다"며 "정홍원 선관위원장은 이미 확정된 경선룰에 토씨 한자도 손대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오직 윤석열 후보만을 위한 경선룰'을 만들려 한다"며 "그런 식으로 경선판을 깨겠다면 그냥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위원장이 경선 룰을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역선택 방지 조항에 반대하는 두 후보가 공정성 문제를 공개 제기한 것이다. 앞서 경준위가 '역선택 방지 조항'이 빠진 경선룰을 결정했지만, 정 위원장은 이것이 확정된 안이 아니므로 선관위가 다시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역선택 방지 조항에 대해 "선관위 결정을 따르겠다"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지만, 캠프 내부에서는 역선택 방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게 나온다. 캠프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쉽게 질 수 있는 야권 후보를 선택하기 위해 여권이 역선택을 조직적으로 조장하는 분위기가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최재형 캠프 이규양 언론특보도 논평에서 "막강한 동원력을 가진 민주당 열성 지지자들이 좌표를 찍고 국민의힘 경선에 끼어들어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역선택 방지 조항은 후보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만큼 이를 둘러싼 내홍 양상은 더욱 극심해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홍준표 호남 지지율…개인기냐 역선택이냐

윤석열에 두배 이상 앞서
양후보 캠프 배경 놓고 공방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호남 표심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홍준표 의원이 호남권 지지세를 동력으로 선두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바짝 추격하면서다.

지난 30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공개한 '범보수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홍 의원은 21.7%의 지지율로 윤 전 총장(25.9%)과 5%포인트 미만의 격차를 기록했다.

특히 보수 후보만을 놓고 보면 홍 의원의 호남 지지율이 25.2%로, 윤 전 총장(11.0%)을 갑절 이상 앞섰다. 현재의 지지율 추이만 놓고 본다면, 민주당 텃밭 격인 호남 유권자들이 보수정당 경선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셈이다.

그렇다 보니 해석을 놓고서도 극명하게 논리가 엇갈린다. 이른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둘러싼 경선룰 갈등과도 맞물려 있다. 홍준표 의원 측은 '홍준표 개인에 대한 지지'라는 입장이다. 홍 의원은 지난 31일 페이스북에서 무안 국제공항 관문공항화, 새만금 홍콩식 개발 등 지역맞춤형 공약에 더해 30년 전 광주지검 특수부 검사시절 조폭 소탕 이력이 지지율에 보탬이 됐을 것으로 자체 분석했다. 부인인 이순삼씨가 전북 부안 출신인데다, 홍 의원 본인이 1980년대 초반 전북 부안에서 방위로 복무한 이력까지 거론했다. 홍 의원은 "여태 단 한 번도 우리 당이 호남 득표율 10%를 넘긴 일이 없었다"며 "이번에는 20%까지 해보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반면, 윤 전 총장 측은 역선택 탓으로 보고 있다. 캠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라는 70~80%의 호남 메인 스트림이 범야권에서 가장 손쉬운 상대로 홍 의원을 꼽은 결과"라고 해석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15명 등록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1일 대선후보 등록 마감결과 총 15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당 선관위는 전날부터 이틀 간 후보 신청을 받았다. 이 결과 박진 전 의원, 박찬주 전 육군 대장, 안상수 전 인천시장, 원희룡 전 제주지사, 유승민 전 의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기표 경남 김해을 당협위원장, 장성민 전 의원, 최재형 전 감사원장, 하태경·홍준표 의원,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이상 가나다 순) 등이 신청했다. 강성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오성균 전 나주 효사랑 요양병원 진료원장, 오승철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도 후보 등록을 마쳤다.

당 선관위는 1일부터 선관위 산하 클린경선 소위원회에서 후보 검증을 실시한 뒤 3일 예비경선에 참여할 후보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당 선관위는 이와 함께 경선 시작 전 공정한 경선 관리를 위해 다양한 당 내외 의견을 수렴하고자 1일과 3일에 각각 경선 후보자 대리인과 여론조사 전문가를 대상으로 여론조사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경선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역선택 방지 조항과 관련한 각 후보의 의견 수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 선관위는 5일에는 선관위-경선 후보자 간담회를 열어 공정경선 서약서 서명식을 하고 후보자들의 의견을 직접 듣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중 앙
꼭! 받아야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절대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24시간 상담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신 용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표창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